

민주 “尹, 한반도 전쟁 획책 의심… 이상한 작전”

‘리·우크라 전쟁’ 정부기조 맹비난
이재명 “심문조 파견, 제정신이나”
박찬대 “전쟁위기 조장 역사에 죄”
김병주 “신북풍몰이” 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윤석열 정부 기조를 두고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이상한 작전”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북한군 전쟁 포로들 심문을 하기 위해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는 북한말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거 제정신이나”고 물었다.

그는 재차 “고문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 한다는 그런 오해를 꼭 받고 싶냐”며 “북한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을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심문을 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경우에 그 파장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전쟁놀이냐”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끼어드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장병 파병 문제도 지금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걸 결코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법에 어긋나고 상식적으

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혹여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회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전쟁을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그래도 불안한데 국민들에게 왜 전쟁의 불안까지 조성하는 것이냐”며 “정권이 어려우면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일들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문제되는 일들을 좀 시정하고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고 앞으로 더 잘할 일들을 야당과 국민과 협의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이상한 작전 안 써도

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국민과 역사가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 정상회담 때 기자 문답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공격 사주를 한 것은 사적 대화로 치부하더라도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살상무기를 언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건 국민의 뜻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왜 우리 정부는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타국의 전쟁에 직접 뛰어들 궁리만 하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 정권이 절대 여기 말려들어선 안 된다”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시동을 걸자 윤 정권이 급발진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쟁 사주이자 신북풍몰이다. 당장 멈춰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 의혹을 덮기 위해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것이냐”며 “윤 정권이 가져온 작은 불씨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당 시당 “정부·여당,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

2주기 추모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8일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시당은 “참사 이후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무수히 많은 사연이 국민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참사 발생 후 2년이 지났지만, 정부·여당은 참사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간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유가족들의 분노와 울분은 가

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우여곡절 끝에 유가족의 양보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제정, 특별조사위 활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조사위원 임명이 지체되거나 예산·인력 지원이 부족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태원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원활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광주시당 또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조국 “매일 탄핵 집회… 조만간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가져 “혁신 길 만드는 ‘담대한 소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망국적인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향해 돌을 던지겠다”며 “동시에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조국혁신당은 소수정당이지만 두려움 없이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담대한 소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처음에 단 하나의 돌을 들었던 제 손에는 이제 저희를 믿고 투표해주신 690만 명 국민의 손이 함께 한다. 그리고 16만 명 당원의 굳센 손이 더해졌다”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종식이 이뤄지는 날 서로의 굳은살 배긴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 당은 지난 26일 탄핵 집회를 원내 정당 중 최초로 열었다”며 “저희 당에 비해 15배 이상 규모가 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탄핵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매달 탄핵 집회를 열고 매주 전국을 돌며 ‘탄핵다방’ 형식으로 국민들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적인 탄핵만이 윤석열 정권 종식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는 향후 일어나는 정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과 하야 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보수층도 결단해야하는 때가 왔다고 본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현재 당내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도 작성하고 있다.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안을 완벽하게 만들텐데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독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0% 안팎에 머무른 당 지지율을 내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을 거치면서 당 지지율은 전체적으로 10%에서 2~3%포인트가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저희 조직세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내년 초 조직 정비를 다 완결하기 전까지 지지율이 갑자기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조직 정비가 끝난 뒤에는 (당 지지율) 15% 정도 될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기초로 (지방선거가 있는) 오는 2026년 6월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당 지지율) 30%를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민생·공동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에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힘 “연금개혁 논의”… 민주 “지구당 부활”

여야, 민생공약협의회 출범 공동 민생법안 추진 공감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반도체·AI·저출생 등 민생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민생·공동 공약 추진 협의회’를 꾸렸다.

앞서 여야 대표가 이런 내용에 합의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같은 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동 공약 추진 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출범식에서 양당은 반도체와 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방안 등 공동 민생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원내수석 간 협상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의 목록을 추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실무진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나아가 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연금 개혁 논의를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째 돼 가고 있다”며 “가능하면 이번에 연금 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수석은 “협의회에서 빠르게 뜻을 모은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충분히 많은 안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가 대립해도 멈추지 않

는 민생119 앰블런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구당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양당 대표가 부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내자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구당 부활 등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미 한동훈 대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정치가 상호 투쟁과 경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는 것이 정치 목적인 아닌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4·10 총선백서 공개… 용산발 리스크 명기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기술한 총선백서가 28일 공개됐다.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와 전략 부재 등 항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발 리스크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조심판론’ 등의 총선 패배 책임을 함께 명기했다.

백서는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6대 개혁 과제 제안’, 공천·공약·조직·홍보·전략·여의도연구원·당정관계 및 현안 등 총 7개 항목별 ‘소위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순으로 목차를 구성했다.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관

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을 지적했다.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에서 선거 전부터 확인된 낮은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관리 부재,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 실패, 당정 엇박자로 인한 혼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김선욱 기자